

순천만국가정원, 2020년 대한민국상품대상서 ‘대상’ 수상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관광 선도한 공로 인정
“관광객 만족할 비대면 콘텐츠 지속 발굴 할 것”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가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상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계절별 자연을 담은 정원연출과 특색있는 테마로 순천 호수정원 내 ‘물위의 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앞 ‘아바타의 숲’, 네덜란드 정원에 국화를 활용한 ‘고흐가 사랑한 아름다운 화실·정원’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톨립 알뿌리 10만 개 희망 나눔 드라이브·워킹스투

행사, 순천만국가정원 랜선여행 추진과 관광객들이 선택한 ‘순천만국가정원 8경 선정’을 통한 맞춤형 해설로 언택트 관광을 선도한 점 등도 좋은 평을 받았다. 대한민국상품대상은 한해 가장 우수한 상품 경쟁력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상품을 선정·발굴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제20회 대한민국상품대상 심사위원장 이 동일 교수(세종대)는 “올해는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관광상품으로써 개별여행의 큰 잠재

력을 갖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을 대상으로 뽑았다”며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 해소와 국민들의 힐링공간 역할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쉽고 힐링을 얻는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만족할 만한 비대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명성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국가정원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관람객이 게이트 입장 시 개인 발열 체크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손 소독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입장시키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물위의 정원’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전남 코로나19 ‘게릴라성 감염’ 비상

73%가 지역 감염...금융기관·교도소·실내체육·유흥시설 뿔려

광주·전남에서 최근 닷새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서고, 확진자 대부분은 지역 감염 사례여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닷새 동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광주가 12명, 전남이 10명 등 모두 22명에 이른다. 이 중 16명, 비율로 73%는 지역 내 감염 사례다.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유입 감염은 30%를 밑돌았다. 순천 시중은행(發) 확진자가 7명에 이르고, 광주교도소 직원 관련 확진자도 4명에 달한다. 여기에 광주지역 확진자 중 일부가 실내 배드민턴 클럽과 수영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밀접촉에 취약한 유흥주점 종사자이거나 서울, 부산 등 외지에서 ‘n차 감염’돼 지역으로 유입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3~4명은 아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다. 전남에서는 동부권이 심상치 않다. 관광도시 전남 여수에서는 지난 2월 대구를 다녀온 20대가 확진된 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역 감염자가 나와 긴장감이 일고 있다.

인근 광양에서는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현직 교고교사로 파악되면서 대입 수능을 앞둔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으나, 다행히 학생 497명과 교직원 78명 등 575명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피트니스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었던 순천에서는 또 다시 피트니스발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허석 시장은 “지난 여름 1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역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순천은 광주·전남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방역대응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확진자들 중 일부가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시설을 여러 곳 이용했고, 일부는 아예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아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그동안 미뤄온 결혼식과 사회모임, 동호회, 심지어 송년회까지도 미리 갖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민권익위,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권고 ‘파장’

10명 중 8명 “민간·군 공항 연계 이전”
“군공항 상관없이 민간공항 先 이전” 11.7%
통합될 경우 42.8% ‘광주무안공항’ 원해

광주 민간·군(軍) 공항 이전문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장 직속 시민권익위원회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에 정책권고키로 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11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1차 전일위원회를 열고 광주시에 공항 이전 시기 재검토 등을 정책 권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8일까지 열흘간 광주시민 2500명에게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 이 맡아 민간·군공항 이전 방식과 시기, 이전사업 추진 주체, 사업비 부담 주체 등 모두 7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설문 결과, 민간공항 이전 시기에 대해 ‘군공항과 동시 이전’ 30.1%,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전남도와 합의가 이뤄질 때’ 49.4%라고

답했다. 반면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쳐 시민 10명 중 8명(79.5%)는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선 39.1%가 ‘시와 도의 소통과 협력 부족’을 꼽았고, ‘국방부 등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26.7%), ‘지역정치권의 소극적 대처와 관심 부족’(26.4%)이 뒤를 이었다. 이전 추진 주체에 대해선 과반(50.6%)이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를 첫손에 꼽았고, ‘국방부 등 중앙 정부’를 꼽은 응답자도 45.5%로 팽팽해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 못잡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공항 명칭은 ‘광주무안공항’이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안공항’(35.1%), ‘무안광주공항’(13.9%) 순이다. 아울러 시민 92.4%는 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인 만큼 법을 개정해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권익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와 도와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

은 후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권고문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소통위는 특히,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간 ‘공항 이전 상생협약’에 대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며 ‘영성한 협약서’에 대한 문제제기도 최종 권고문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선7기 취임 후 천년공동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야심차게 맺은 공항이전 상생 협약은 2년 만에 대폭 손질 또는, 최악의 경우 백지화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민의를 최우선에 둔 공론화의 결과물인 만큼 시와 도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이전’이라는 무리수를 둔 광주시의 출구전략으로 시민조사가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일부 설문 문항이 ‘민간공항 우선 이전’에 대한 반대 심리를 유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신봉우기자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